

민생경제부터 안보·저출생까지... '대권주자' 부각

이재명 민주당대표 공식 출마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평가 윤 대통령 탄핵 직접언급 피해 검사 탄핵 반발엔 "내란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에 앞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생·경제를 비롯해 안보, 저출생 문제, 미래 비전 등을 총망라해 당 안팎에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민생 회복'과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연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권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문제도 아젠다로 던졌다. 저출생 문제는 노동시장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최소 2035년까지 주 4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이라고 했

다. 이날 출마선언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연임 도전을 결심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면 연임 도전이 '득보다 실'에 가깝지만, 윤 정부의 실정에 맞서기 위해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포기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설명이다. 그는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개인적인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표직은)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 또 기자분들과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많이 새롭게 정비하고 나타나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나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자신의 상황을 '상중가'에 빗대어 표현하며 "사실 이때 팔아야 하고 앞으로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의 핵심은 지금의 혼란스럽고 엄중한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분위기 속 '일극제'를 우려하는 당 안팎의 시선에 대해선 "일리가 있다"면서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나,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나쁘게 표현해 누가 과연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날 오전 이 전 대표를 향해 탄핵론에 대한 '오·엑스(O·X)'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세상 모든 답에 O·X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O·X 말고도 답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한다"며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여당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O·X를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절하고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위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선 "검찰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한다"며 "이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중합부동산세(중부세) 입장을 묻는 질문엔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과 관련해선 "금투세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합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문자 논쟁을 보니 제가 좀 민망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안도걸 "지난달 '나홀로 자영업자' 13만5천명 줄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10일 "올 6월에만 '나홀로 자영업자' 취업자 수가 13만5000명 줄었는데 이는 8년 8개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고 자영업 고용 상황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5%에 이르고 91만1000명이 폐업한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수 침체가 고용 상황에 타

격을 입힌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자영업자의 생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 기존 금융지원 확대안을 제외하면 전기로 1000억원 수준이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전부"라며 "당장 자영업자의 생계 지속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두관 "총선 압승, 이재명 아닌尹 덕분"

"당헌당규 개정,李 맞춤형" 비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은 10일 "지난 4·10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한 이유는 이재명 전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용을 진단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사이익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위인 설관(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이라며 "당 대표 1년 전 사퇴 예외는 전형적인 이재명 맞춤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통인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제가 대표를 맡게 되면 좋은 안을 만들어서 중앙위원회 당무위에 토론 부의를 부쳐서 원상회복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시스

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선 일각의 '약속대련' 주장에 대해 "제가 참여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도 하면서 나름대로 김두관 정치를 해왔다. 어찌 보면 정치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고 제 나이가 몇 살인

데 제 정치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도 총선 압승에 대해 "우리 당 지도부가 탁월하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공천 혁명을 통해서 압승했다는 데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임미애 "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줄폐업'"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산 양식업계 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사진)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제주와 완도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과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다.

임 의원은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법 당론 추진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처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기소분리와 관련 법무부·검찰·법원·시민사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성훈 의원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기관 '공소청'을 신설하고, 검찰

을 공소청 중수처, 국가수사본부 3개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을 발표했다.

중수처를 따로 두는 전제 하에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고 검사 사무를 총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검찰조직은 기소와 공소유지 부서로 변경하고, 검찰이 하던 각종 수사는 경찰과 중요분야별 수사처로 나눠 이관하자"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역량을 강화해 검찰과 경찰의 비위를 막고 감시하는 기능을 높이고, 심급제 같은 보직규정을 폐지해 검찰

카르텔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중수처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중수처에 검찰의 2개 범죄(부패, 경제범죄) 수사 역량과 수사 인력을 이관하고 다른 중대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중수처를 전문화된 수사기구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총리실 산하 중수처가 수사를 맡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TF단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수용해서 법안을 성안하겠다"며 "7월 중 법안을 만들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병무청, 내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

병무청은 오는 24일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의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지역별로 접수 일정 다르므로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총 3회 접수 중 이번이 1회차다. 뉴스시스